

# 내부 정비 마친 與野... 전세특별법 등 살바싸움 본격화

신임 원내대표 체제 출범  
노란봉투법 등 충돌 예고  
'강행 vs 거부권' 악순환 우려



지난 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의 전세사기피해자 대책 마련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태의 민주노동총 부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 등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금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

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

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새로운 시대 여는 시작점” vs “당당한 대일 외교 펼쳐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 與野 한일정상회담 공방

국민의힘 “반일 선동 멈춰야”  
민주당 “귀 막고 굴욕외교 지속”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편하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음에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등은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

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숭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

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만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당 징계방침에 반발... 여론몰이 나서

징계 반대 서명서 등 부각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 파문' 등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시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죄과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민주당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검찰특별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을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해 체리파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를 변경까지, '윤심'을 총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